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 지상 중계

“특별법 조항 삭제 위기…법적 보장·산업 시너지로 돌파”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0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3차)에서 행정통합에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30년 만의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시·도민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의 반대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조항이 대거 삭제될 위기는 우려에 대해 양 시·도지사는 “법적 보장과 산업적 시너지로 반드시 돌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0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세 번째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로, 특히 최근 국회법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별법 ‘내용 부실’ 우려에 대해 시·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양 시·도지사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386개 조항 중 상당수가 정부 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현재는 범정부 차원의 조율 단계”라며 전략적 대응을 약속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대항마는 오직 통합뿐”=강기정 시장은 먼저 통합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 시장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통합을 추진하느냐고 묻지만,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세 번의 실패를 겪었고 그사이 청년들은 떠나고 일자리는 사라졌다”며 “지금의 통합 속도는 우리의 절박함에 비하면 결코 빠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입만 열면 청년들이 떠나간다. 일자리가 없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왔다”며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1986년도 광주직할시가 분리될

강기정 광주시장



통합, 선택 아닌 생존 위한 절박함
통합특별시, 청년이 찾는 도시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논의 필요

김영록 전남지사



행정통합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초광역 전략으로 수도권에 대응
지역 전체 이익 극대화 방향 노력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교부세 증액 법적 보장 담을 것 전남 ‘재생에너지’·광주 AI 결합으로 세계적 ‘에너지 수도’로

때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남도청에 근무했지만 분리는 반대했었다”며 “지난 1995년 행정통합을 추진했고 또 2021년에도 행정통합을 추진했었지만, 이번에는야말로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어제 국무총리 공관에 가서 특례를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돌아왔다”며 “행정통합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잘 마무리한다면, 광주 전남이 그동안 시대에 뒤떨어졌던 것을 한 번에 다 뒤집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광주 전남 대부흥으로 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조항 삭제 우려에 “법적 근거 명문화로 배수진”=질의응답에서는 주민들의 우려 섞인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정부 부처 심의 과정에서 특별법 조항 119개가 부동의 처리됐다는 소식에 시도민들

은 걱정을 나타냈다.

강 시장은 “특별법의 386개 조항이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라며 “정부 부처가 전국적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법에 명시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 등 배수진을 치고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또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확고하다”며 “어제도 총리와 만나 에너지·AI 특례 등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31개 핵심 조항에 대해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한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상시적인 교부세 증액을 법에 담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산업 시너지 등 현안 질문 봇물=주요 현안에 대한 시·도민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광주 근교권을 대상으로한 타운홀미팅만큼,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노웅근 나주시 이동장연합회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와의 시너지를 고려해 나주로 집중 유치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나주 혁신도시는 이미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2차 이전 기관들도 나주를 선호할 것”이라며 “광주 원도심 활성화도 중요한 만큼 시와 잘 협의해 맞춤형으로 유치하겠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통합이 되면 광주와 전남 어디에 유치하느냐는 소모적 논쟁이 사라질 것”이라며 “지역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적 측면에 대해서는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AI 기술 결합이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됐다.

김 지사는 “전남의 신산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풍부한 에너지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을 끌어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정답”이라며 “여기에 광주의 AI 인프라가 더해지면 세계적인 ‘AI-에너지 수도’가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게 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여론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혔다.

강 기장은 “1차 이전에는 공동으로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방’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부 나주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욕심이라고 본다”며 “표 떨어지는 소리일 수 있지만, 그렇게 가면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특별시, 청년이 찾는 미래로=두 단체장은 통합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타운홀 미팅을 마무리했다.

김 지사는 “AI·에너지·문화가 어우러진 ‘산업 수도’이자 400만 시·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모두가 ‘인 서울(In Seoul)’을 외치지만, 우리는 ‘인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며 “광주라는 지명을 지키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광주와 전남이 합쳐져 더 커진 ‘광주 정신’으로 청년이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양 시·도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 특별법안을 보완하고, 국회 상임위 통과를 위해 여야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은 오는 13일 마지막 4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타운홀미팅도 이름과 달리 토론 형태로 진행되면서 주민의 궁금증 해소에는 다소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힘차게 달린다!

소외지역 원스톱 금융지원

격오지, 전통시장 등
금융 소외지역 사업장 방문(연 70회)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
재무상담까지 현장에서 즉시 지원

이자 부담 낮은 저금리 대출

'가드림' 전용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지원

이자지원(3.0~3.5%)을 통해
실질 부담 금리 1% 대

현장 목소리를 담은 소통

현장 간담회를 통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전남도 정책홍보 및
체감도 높은 지원정책 발굴

전남신용보증재단 가드림금융센터 ☎ 061-729-066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